



해양수산부, 남북해상수송지원센터 개관

해운조합에 설치, 남북해운활성화 지원

남북해상수송지원센터가 10월4일 오전 11시 강서구 등촌동 소재 한국해운조합에서 문을 열고 본격적인 남북해운협력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과 한완상 대한적십자사 총재, 한국선주협회 장두찬 회장, 한국해운조합 박홍진 회장, 김성수 이사장, 한국항만물류협회 이국동 회장, 인천항만공사 서정호 사장, 해양수산부 이재균 해운물류국장 등 관련 기관·업단체 임직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어 해운조합측은 이날 개관 현판식에 이어 메이필드 호텔에서 남북해운협력 진행경과 남북해운현황, 남북해상수송지원센터 운영방향 등을 소개하는 행사를 가졌다. 남북해상수송지원센터 이사장은 한국해운조합 김성수 이사장이 겸임하게 되며, 해양부, 통일부 등 관련 부처 및 기관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10명으로 구성)를 두고 주요 정책결정 및 자문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오거돈 장관은 보고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는 지난 8월1일 남북해운합의서가 발효됨으로써 남북항로가 명실상부한 민족 내부항로로 거듭남을 축하하는 자리로, 앞으로 남북간 해운당국과 기업들이 서로 합심하여 남북의 바닷길을 통일의 실크로드로 가꾸어 나가기 위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오 장관은 “이번 남북해운합의서 발효는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장장 4년여에 걸쳐 남북협상에 최선을 다하여 얻어낸 결실이고, 해운합의서가 발효됨에 따라 이제 남북간

항로가 명실상부한 민족 내부항로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우리의 국적선과 국적선원들이 남북간을 왕래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는 반세기동안 중단되었던 남북한간 해상항로가 복원된다는 의미 외에도 향후 남북교역과 투자가 활성화되어 민족 경제공동체 건설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남북해상수송지원센터 설립 보고회에서 해운조합측은 보고를 통해 정부는 남북해운합의서 발효를 계기로 남북해운교류를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 내항화물선사에 대해 5000톤급 이상의 중·대형선을 집중 확보할 수 있도록 선박 건조 자금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10월4일 한국해운조합내에 남북해상수송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남·북한 해상교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남북해상수송지원센터는 남북해운협력의 창으로서 5개 핵심사업으로 △적격선박 확보 및 항로망 구축 △국적선사간 컨소시엄 구성 추진 △선·화주에 대한 서비스 정보 제공 △각종 제도 개선 △민간교류 지원 등의 추진을 통해 남북해상수송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